

## 월요광장

## 개인 차원에서 보는 국민연금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연금 문제가 여론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결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선거공약을 자비리는 것이라고 아동의 맹렬한 공격이 있었고, 공약을 뒤엎은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처음의 격앙된 분위기는 나라를 뒤엎을 만한 큰 사건이 터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며칠 이 지나고 보니 이러한 흥분은 토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토의가 보다 자제된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 토의의 스타일이 그러하고, 좋게 본다면, 문제의 고찰에 마음을 다하려는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주의할 것은 대결의 열기에서 나오는 협

한 말들도 불구하고, 두 진영 사이에 근본적인 합의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복지제도의 필요에 합의하고 있는 것이다. 차이는 그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의 규모와 속도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실 만에 주목한다면, 문제는 퇴직 노령자 연금의 월 수령액에 월 10만 원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20만 원을 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 정도의 액수를 두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니, 과연 우리 국민의 정치 열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이는 10만 원인데, 월 10만 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그 정도의 돈은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것이다.(국가 총 예산이라는 관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생기지만.)

그러나 이 돈이 적지 않다는 것도 틀리지 않는 말이다. 월 63만 원의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총액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런데 현재의 쟁점을 떠나서 생각하면, 더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는 월 60~70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금

액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기여했을 때 받게 되는 연금 액수이다.(총액 계산의 기준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인데, 일단 독거자(獨居子)의 관점에서 그렇지만, 간략하게 말하려고 할 때 기준은 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0~70만 원은 퇴직 이전에 비해 월수입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퇴직자가 그 생활비를 3분의 1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수준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는 것인데, 허스스럽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던 경우라면 몰라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기준에서 200만 원 월수입을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최소한의 생활 월수입 60~70만 원이 적정한 액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액수로 목숨을 부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형식적 해결은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입의 보장에는 지금 형편에서는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실질적 방안을 연구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논의에 여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뜻에서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필자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진보적 철학적 마사 너스바움과 자리를 같이 한 일이 있는데, 그때 노인 복지가 화제에 올랐다. 자신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부모를 모시는 우리의 전통이 노인 복지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부에서는 세금이나 주택 문제 또는 주택 설계 등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너스바움 교수는 원강하게 노인연금, 양로원 등 사회제도와 시설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그의 의견이 모든 문제를 제도로서 해결할 수 있다는 진보주의, 그리고 다른 학파로는 미국적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한국인도 이제는 완전히 제도주의자, 개인주의자로 되었다. 너스바움 교수는 선천지명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법조칼럼

## 정의와 사랑

김영오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

검사라는 직업은 정의(Justice)를 좇아 '진실(Truth)'을 찾기 위해 '글쎄(Doubt)'와 '아마도(Maybe)'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죄의 무게를 재는 마음속 저울의 축도 좌우로 기울며 분동을 거듭한다. 더군다나 가족 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투 때면 무엇이 전륜을 거스르고 이들을 돌아서게 한 것일까 '글쎄'와 '아마도'를 반복하며 진정한 정의에 대한 검사로서의 번민을 더하게 만든다.

5년 전이다. 2008년 여름 옛된 얼굴의 A(당시 21세)양이 갓 백일이 지난 아이를 등에 업고 검사실을 찾아왔다. 지방 국립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캠퍼스 커플로 남편을 만나 일찍 가정을 이뤘다. A씨는 2006년 불의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슬픈 사연

을 갖고 있었다. 당시 A양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 A양은 고교 졸업 때까지 아버지와 살다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던 어머니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5개월이 지난 후 자신 앞으로 소장이 송달됐다.

고모부의 친형인 B씨(당시 52세)가 "아버지가 죽기 전 자신에게 5000만 원을 빌려갔다"며 차용증을 근거로 A양에게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민사재판에서는 B씨가 제시한 차용증을 증거로 채택해 법정상속인인 A양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큰 돈이 없었던 A양은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집과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 법원을 오가며 경황이 없었던 A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줄곧 "집을 포기하라"며 자신을 종용했던 친할머니(당시 80세)와 고모(당시 48세)의 행동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A양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입장장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 물증 하나 없이 하소연에 가까운 고소장을 처음 접했을 땐, 단순 친인척 간 재산다툼으로 볼 수 있었다. 이미 법원(1심 민사재판)에서 A양은 아이를 안고 다시 검사실을 찾아왔다. A양은 법정에서 가족끼리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싫어 포기할까도 고민했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치밀하게 법원을 준비하여 아버지를 잃은 자신과 동생에게 모질게 대했던 할머니와 고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후 A양은 법원에 "할머니와 고모가 차별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게 됐다.

문득 당시 A양의 말이 떠올랐다. "제가 아

무리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도 이렇게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것 어떤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

A양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 생각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 이후 법원은 A양의 탄원서와 피해액이 상당부분 변제된 점을 들어 할머니와 고모 부등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의의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잔인하다는 것이 짚지만 검사로서 일하고 얻은 교훈이다. 죄와 벌로만 끝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5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에서 잊히지 않는 까닭은 죄의 무게를 덜어냈던 용서, 사랑 때문인 것 같다.

## 기고

## 광주교육, 인재 육성 청사진 필요한 때다

박표진  
광주대 교수·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은 학교교육을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풍속도가 달라진다. 우리 현실에서 교육의 변화가 학우가 될 때 대입제도를 손대지 않고는 어느 것도 풀어갈 수 없다.

사실, 성공적인 대학 진학은 한마디로 실력을 갖추는 일이다. 어떻든 광주는 수능성적 결과로 수년 동안 전국의 최상위를 달리는 저력을 과시해 왔다.

이런 성과는 지역적 '한'(恨)을 공부로 넘어서 삼킬 수도 있으나 거시적인 인재육성의 청사진은 갖추지 못한 채 허리띠를 풀리면 교육지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아쉽다.

이번 지역 정서를 반영이라도 하듯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교육력 제고'라는 슬로건 아래 그 명성을 회복하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제워지지 않은 채 구호만 무성하다는 비난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교육감 선거 대비를 위한 조작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 바 있다.

이미 지역사회는 정의력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글로벌리더로 성장시키는 인재육성이야말로 지역이 거듭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목하고 있다.

이에 실력 광주의 위상을 되찾는 일은 근시안적인 처방으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이다. 입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사고력 중심의 논술교육, 주론능력을 요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치활동 등 장기적인 전략과 환경축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 할 때마다 학교에서 수능시험만 잘 보는 인재육성이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능력까지 기울 수 있는 지역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자고 편안히 풀어놓을 때여를 지나야 한다. 시민들이 사고력 시장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그냥 공부를 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정지원, 시스템 개발, 중장기적 인재양성 밴드를 만들어야 제대로 된 지역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일시적인 장학금 지원이나 학력제고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걸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범시민적인 열의를 모으자는 것이다.

둘째,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고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올바로 키워낼 수 있는 교사진이 갖춰지지 못하면 인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없다.

'한국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처럼 우수한 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것처럼 우수교사 육성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지역 인재육성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과업이어야 한다. 이미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도 지자체가 교육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고력 시장에 의존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역교육의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넷째, 광주만의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창출해야 한다. 타지역과 다르게 광주·전남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친환경·농생명 기술이나 미지의 무한한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해양과학 기술, 남도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오랜 경험과 전통을 이어온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지역의 힘을 모아야 재대로 된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다. 현재 호남 인재들의 역외 유출이 타지역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그만큼 호남에는 인재들이 머물 체계적인 교육적 인프라와 되돌아올 직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위의 제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빛고을 인재육성재단'의 설립이다.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국제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육성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의식이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단 쓰레기 투척과 금지된 곳에서의 취사행위나 비박 등이 여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적이 드문 야산의 도로 옆은 많은 양의 쓰레기로 덮여 있다.

행사주최 측이나 지자체에서의 단속도 떨어져 있다. 최근에는 취객들의 무분별한 행동이나 아무 곳이나 버려지는 우리의 양심 때문에 사람들 눈살을 짜푸리게 하고 있다.

다시 가져오도록 하자. 내 차가 또는 내 가방이 더러워질 것을 우려해서 산에 또는 들에 던져진 쓰레기가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행위를 위해 자연을 해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자연은 후손에게 물려줄어야 할 우리 모두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층 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때이다. ▲이재훈·농협한성교육원 교수

## 社說

## 방과후학교, 염가 사교육으로 놔둘 건가

학생들의 특기적성 개발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염가의 사교육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지역 방과후학교 수업은 절반 이상이 국·영·수·과학 등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밝힌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301개 초·중·고교가 운영한 방과후학교 강좌는 51.5%가 국·영·수·과학 등 입시 중심으로 편성됐다. 전남지역 830개 학교의 국·영·수·과학 개설 비율 역시 평균 46.4%로 비슷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치중해 잊어버릴 수 있는 개성이나 창의적인 소질을 살려주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점수를 높이고 보자는 학교와 학부모의 현실적인 욕구 때문에 방과후학교는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사교육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당국은 방과후학교를 시작한 것은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치중해 잊어버릴 수 있는 개성이나 창의적인 소질을 살려주자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당국은 대형 의류유통업체인 이랜드그룹이 지난달 17일 신청사 지하 1층 및 지상 1층~4층에 임대 형식으로 패밀리 레스토랑과 의류 전문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주 계약을 맺고 있다. 이전에는 광주지역 65개 교에서 시행한 특기적성 강좌는 9.4%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특성화고에서 개설한 것이어서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는 남구청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도맞지 않는 '이중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권 보호를 위해 재정했던 조례를 자체 수익을 위해 개정한 게 가능한 일인가. 또한 백운광장 인근에 들어서려는 훌륭스러운 입점을 반대해왔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구청은 상인들과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대기업 입점을 재고해야 한다.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쳐사는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無等鼓

아마도 10월이 되면 가장 난감한 예술인 중 한 명이 고은(80) 시인이지 않을까 싶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벌써 10년 넘게 '불발', '고래', '아쉬움' 등의 단어가 담긴 기사가 실리리 말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노벨상의 계절'은 노(老)시인과 함께 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분명 올해도 마찬가지일 터다. 시인의 집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수상에 실내에 걸려온 그림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일이다. 그림은 신청사 건립 뒤 높은 입대료 때문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없어 수익이 창출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드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제정한 조례안에 대해 지난달 말 개정에 나섰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시켰다. 노벨상 수상자 19명을 보유한 일본은 '설국'의 가와타 야스나리(1968)와 오에 겐자부로(1994)가 이미 문학상을 조사특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남구청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도맞지 않는 '이중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상권 보호를 위해 재정했던 조례를 자체 수익을 위해 개정한 게 가능한 일인가. 또한 백운광장 인근에 들어서려는 훌륭스러운 입점을 반대해왔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구청은 상인들과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대기업 입점을 재고해야 한다. 눈앞의 수익에만 급급,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쳐사는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